

새정치민주연합	논평	충남도당
일자: 2015년 5월 8일(금)	대변인 : 어기구 위원장(010-3433-7084) 담 당 : 이영구 정책실장(010-2390-682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19-37 승지빌딩 503호 / 041-569-1500		

## “박근혜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자리에서 30만㎡이하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편의시설 및 공장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부분이다.

그린벨트 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던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근간을 허무려고 하는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수도권 개발 과밀화의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288㎢ 중 48%인 140㎢가 수도권 지역이었고, 앞으로 해제할 그린벨트 233㎢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97㎢로 4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면, 수도권의 경우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꼴”이라는 환경단체의 비판은 타당하다.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고삐없이 풀린다면 기업과 공장들이 수도권에 입지하려는 현상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해에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기요틴(규제 처형)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올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과감하게 풀고,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이번 정책은 그린벨트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혜택을 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규제 개선사업이 수도권 집중화와 난개발을 낳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린벨트 규제개선의 혜택이 투기꾼들이나 토건사업자들보다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억제 차원에서 볼 때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환경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2015년 3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